

#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조신행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흡연(담배 사용)은 수많은 질병과 사망의 직간접적 원인이며 흡연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금연운동을 펼쳐 왔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비준(2005년), 여러 차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등을 통해 국민의 담배 소비 감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학계·시민단체·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조금씩 담배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다. 전 국민 모두가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20년 34.0%로, 약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청소년 흡연율도 2020년 기준 4.4%로 2005년 11.8%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해 담배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및 전 국민 흡연 예방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며 2년마다 교체·표기하고 있다. 더불어 금연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공중이용시설과 일부 실내 구역은 담배 연기에서 자유로워졌고, ‘흡연은 질병’으로 인식하여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담(No 담배) 캠페인을 추진하여 흡연 예방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14년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15년에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고,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담배규제 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였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비규범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연 상담 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 치료,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 캠프,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등 흡연자 나이, 성별, 흡연 정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세계 주요 담배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소득계층 간 흡연율 차이로 인한 건강 격차,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흡연율은 1998년 6.5%, 2010년 6.3%, 2020년 기준 6.6% 등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담배의 실질 구매 가격이 하락하여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최근 새로운 맛과 향, 형태로 출시되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증가하여 새로운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신종 담배가 덜 위험한 제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담배 마케팅도 다양화되어 담배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정책이 ‘궤련’, ‘흡연자의 담배 소비 감소’ 중심이었다면 향후 담배규제 정책은 ‘포괄적 규제’와 ‘흡연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빠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담배시장만큼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하고, 새로운 흡연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산되어 있는 담배규제 법령 체계<sup>1)</sup>를 정비하고, 궤련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와 방식의 담배가 포괄적으로 관리·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틀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담배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건강 위해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와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1)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 담배 사용 폐해 예방 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각종 세법 등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유관 기관과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과학적인 근거 개발과 판단을 위한 역량과 국제 담배규제 네트워크의 참여·협력을 강화하여 담배규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법·제도적 개선 외에도, 미래 세대의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참여하는 금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흡연 욕구를 야기하는 무분별한 담배 광고·판촉·후원 행위를 규제하는 흡연 조장 환경 개선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금연 생각과 의도가 있지만 시도하지 못하는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특수직·감정노동 근로자 등의 금연 취약계층과 고도흡연자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접점을 찾아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된 대상과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촉촉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향후의 담배규제 정책은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며, 흡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금연문화와 규범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냈듯이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갈등을 줄이는 담배규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제언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醫